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

## Contents of the five-year Plan for Green Growth



하상수\*  
Sang-Su Ha

### 1. 5개년계획의 개요

#### 1) 5개년계획의 의의

기후변화, 에너지시대에 정부의 촉매·조장·보증·권능 등 정부에 부여되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기후 및 에너지 대책은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대책요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은 범국가적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과제 및 연도별, 사업별 예산을 반영하여 5개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는 차별화된 ‘녹색성장’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 부문별 계획과의 관계

녹색성장 국가전략(2009년~2050년)의 비전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경쟁우위 선점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와 과제추진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며,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대한 중기 추진과제 및 담당부처, 연도별, 투자 및 지원, 기대효과 등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추

진하기 위한 5개년계획(2009년~2013년 중기전략)을 수립하였다.

#### 3) 5개년계획 수립과정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식경제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각 분야별 관련대책 수립 및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표 1> 5개년 계획의 추진 경과

| 연도      | 주요추진 내용   |
|---------|---|
| 2008.8. | 건국 60년 기념사에서 향후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제시       |
| 2008.9.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 기본계획’ 수립                |
|         |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계획’ 수립              |
| 2009.1. |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                     |
|         |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수립                 |
|         | ‘녹색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
| 2009.2.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 확정                             |
|         | 녹색성장위원회 정칙출범 및 1차 위원회 개최                        |
| 2009.3.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본격화 -추진조직 구성 및 작업진행   |
| 2009.5.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보고서 작성 - 정부·민간 공동수행      |
| 2009.6.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의 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립       |

\* 강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angnam University  
E-mail : knuhs@kangnam.ac.kr

2009년 1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포하였고, 같은 해 2월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하여 경제와 환경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구조 도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이 본격화되어 ‘녹색성장시기’를 여는 범국가적 장기 전략 및 중기계획을 수립하였다. 5개년계획의 추진내용은 <표 1>과 같다.

## 2. 5개년계획의 추진여건

### 1) 대내적 여건

1960년~1980년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을 토대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발달되어 이 시대의 경제성장원동력이 되었다. 1990년대에는 인재육성과 기술개발(R&D)에 대한 집중 투자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시기반 경제로 전환하였다. 2000년대 이후 최첨단 기술과 함께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지식산업을 바탕으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R&D 투자 및 국가 기술경쟁력 지표가 세계 10위 이내로 진입하게 되었고 경제성장과 함께 극심한 빈곤에서 탈출하고 생활 수준 개선 및 복지가 증대 되었다.

1950년대 최빈국으로 해외 원조 수혜국에서 현재는 공여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사회적 안락과 더불어 보험·연금 제도 등 사회보장 시스템 확대와 여행과 여가 문화 등 향유 문화가 전 계층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장위주 정책의 추진으로 인한 국토 훼손 및 생태계 파괴가 증가되고 물질적 풍요에 따른 결과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삶의 질 추구하고 더불어 환경 개선 및 자연 생태 보존이 요구된다.

### 2) 대외적 여건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산업혁명 이후의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가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IPCC 보고서에는 온실효과의 주요 원인이 인간 활동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표면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지난 100년간(1906년~2005년) 전세계 평균기온이 0.74°C 상승했으며, 2100년까지 해수면 상승의 최고범위가 약 1m 혹은 그 이상에 달하여 최소한 10명중 1명의 인구가 삶의

터전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 국제 과학 회의). 또한, 평균기온 상승으로 인해 빙하가 녹거나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홍수, 가뭄, 폭염 등과 같은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여러 매체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후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 간 기후변화 협약 체결 경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국가 간 기후변화 협약 체결 경과

| 연도   | 협약           | 주요 내용   |
|------|--------------|---|
| 1992 | 리오 UN 환경개발회의 |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연합협약 (UNFCCC)                        |
| 1997 | 교토의정서 채택     | 37개 선진국과 EU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협의                   |
| 2001 | 마라케쉬 합의문 채택  | 교토의정서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 경제성장 감축목표 방안 제시              |
| 2005 | 교토의정서 발효     | 온실가스 감축 1차 의무공약기간 (2008~2012) 이행준비 및 교토 메카니즘 활용 |
| 2007 | 발리로드맵        | 2009년 말까지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UNFCCC(United N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으로 1992년 리오 정상회의에서 세계가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

### 3) 환경변화와 도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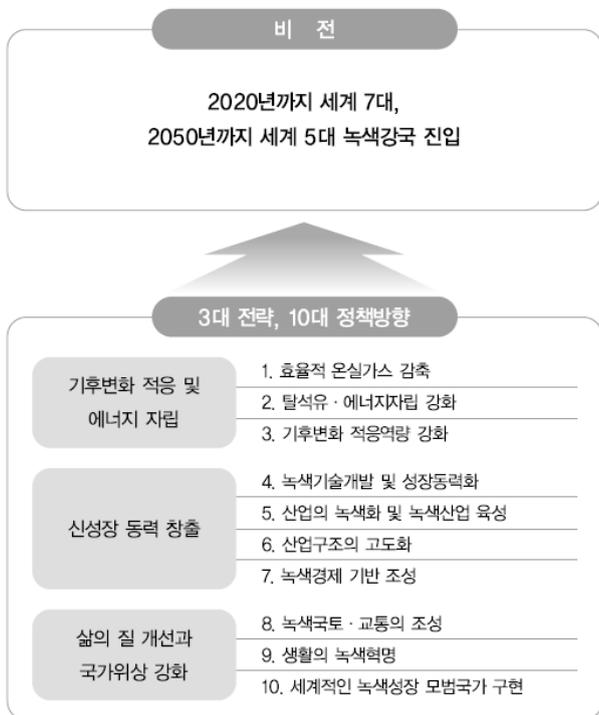
중소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취약,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설비투자 부진, 그리고 해외규제 강화 등 성장을 저해하는 내·외적 요인이 대두되어 경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이에 따른 경제 성장의 정체가 우려된다. 그리고 경제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계층 및 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되어 사회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적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에너지 수급 불안 및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모델 및 동력 발굴이 시급하고, 사회 불균형 해소 및 환경보전·생태계 녹색화의 요구가 증대되며,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는 것이 현 시점 당면 과제라 할 수 있다.

### 3. 5개년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 1) 비전

5개년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은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및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비전 및 추진전략

#### 2) 녹색성장 정책 수단

경제주체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녹색 R&D 투자, 녹색 뉴딜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투자이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등 에너지 효율 상승 및 청정에너지 활용과 같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사

회에 명확하고도 직접적인 사인을 제공하고 발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셋째, 친환경 세계개편, 발전차액 보조금 제도 등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유인책 및 반유인책이 필요하다.

넷째, 환경세, 오염분담금, 배출권거래제 등 숨겨진 비용이 경제, 환경, 사회정책에 포함 될 수 있도록 돕는 시장원리에 기초한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녹색 교육을 정규 학과과정으로 포함하고 대충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시민들의 의식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 3) 5개년계획의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

녹색성장 5개년계획은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를 3대 전략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의 10대 정책방향에 대해 4대~9대 총 50대의 세부실천과제를 지정하고 있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4장~6장에 나타내었다.

### 4.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주요 선진국은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EU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09년 4월에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EU 기후변화 종합법을 발효하였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감축목표를 법안에 명시한 ‘기후변화법’을 제정하였다. 미국은 2009년 3월 온실가스 의무등록제 도입안을 마련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중기 목표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2009년 6월 2005년 대비 2020년에 15% 감축목표를 발표하였다.

국내의 경우, 1985년~1995년에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연평균 10.3%로 세계 최고수준이었으며, 2005년 기준 온실가스 절대배출량은 OECD 내 6위, 연평균 증가율은 1위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량 증가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선언하고, 이후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 2)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주요 선진국은 에너지 효율향상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CO_2$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30% 개선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EU는 20-20-20 전략(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개선 20%, 온실가스 감축 20%,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20%)을 수립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및 청정에너지 확대를 에너지 전략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에너지 소비와 생산구조는 해외의존형·탄소다배출형 체제로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2.4% 수준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탈석유와 에너지 자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 3)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남에 따라 더욱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 및 적응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주요국은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합리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과학적 정보에 근거한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경우, 2008년 12월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 및 ‘국가기후변화 적응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차원의 적응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후변화가 보건, 농·수산업, 수자원, 재해 등에 미칠 영향과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미흡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모델, 시나리오 등 기반인프라 구축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향후 기후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차세대 기후변화 예측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 5. 신성장동력 창출

## 1)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주요 선진국은 녹색성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녹색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2006년 2월 첨단에너지계획(Advanced Energy initiative)을 발표하였고, 일본은 에너지 공급(고효율 천연가스 발전 등)과 수요(연료전지 등) 측면의 21개 기술을 선정하여 2008년 5월 Cool Earth 에너지혁신 기술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주요 선진국은 녹색기술 R&D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종합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인프라 구축 및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국내 녹색기술수준은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의 녹색기술 R&D 투자에 비해 매우 미흡(녹색 R&D 투자는 2008년 대비 1.45조원으로 전체 투자의 15% 수준)하며, 녹색기술 분야의 기술수준 역시 선진국 대비 10%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2)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을 비롯하여 글로벌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녹색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는 조기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6개 부문(자원재활용, 산업용 섬유, 바이오제품, 신재생에너지, e-헬스, 지속가능한 건설)을 선정하고 규제 개선, 공공구매 확대, 표준화 및 인증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에너지다소비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산업부문(57%), 특히 제조업(산업부문 소비 중 94%를 차지)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며, 높은 해외자원의존도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소비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 분야 녹색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국내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녹색화 및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다수 기업의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 3) 산업구조의 고도화

포스트 교토체제 진전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형 산업구조 전환이 최대 현안과제로 부각되었다. 미국「Innovate America」, EU「EU 서비스 지침」, 일본「신산업 창조전략」, 대만「서비스 산업 발전정책 및 행동방안」등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지식서비스 산업의 전략적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식과 기술혁신

이 노동·자본 등 유형자산 보다 중요한 생산요소로 등장하여 기업 가치를 결정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술간·산업간 융합으로 세계경제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기후변화 및 에너지 수급 변화 대응력이 낮고,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 에너지·환경문제의 대두, 저출산·고령화 등의 경제 환경 변화로 기존 경제성장 전략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첨단 융합산업 및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 4) 녹색경제 기반 조성

주요 선진국들은 1990년부터 녹색금융, 탄소시장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및 탄소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EU 국가는 환경경제 강화(Eco-Tax Reform : ETR)를 소득세·법인세·사회보장기여금경감 등과 병행 실시하여 고용과 투자를 증대하였다. 또한, 녹색기술,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2009년~2020년 12년간 총 50조원을 36개 ‘녹색 뉴딜사업’에 투입하여 약 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제도 등의 인프라 및 핵심인력 등의 부족으로 녹색경제 기반 조성 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 6.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 1)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탄소저감형 지역·도시공간 구조 구축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국가지침제공 및 지원제도 등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녹지·생태공간 확충, 녹색건축물 확대, 자전거 중심의 녹색교통 문화정착 등 적극적인 Action Plan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탄소저감형 그림홈, 그린빌딩 등 녹색건축물 인증체계를 통합하여 구축하고, 이를 연계하여 건설부문의 녹색산업화를 유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생활 고급화, 대형 복합건축물 증가로 가정·상업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는 증가추세에 있고 도심 생태공간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최근 ‘저

탄소 녹색성장’의 비전 제시로 생물서식공간, 탄소흡수원으로서 생태공간의 중요성 인식으로 다양한 숲 조성, 숲지확충 등 생태공간을 확충하려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2) 생활의 녹색혁명

환경규제 강화와 인식변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이 확산되는 추세이고, 미국의 ‘에코맘’, 영국의 ‘에코드라이빙’ 등과 같은 친환경 생태문화 확산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시도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소비 확산 등 생활에서의 녹색운동과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친환경 생태문화가 보편화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민들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사실 인지 수준은 높은 편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은 미흡한 실정이며,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은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생활 속 실천과제 및 실천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대국민 녹색성장 공감대를 확대하고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녹색생활 실천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 3)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일본은 2007년 이후 저탄소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환경기술을 경쟁력으로 활용하여 환경시장 진출과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여 환경·에너지를 최상위 국가 아젠다로 격상했다. 미국은 에너지절약, 재생에너지 산업에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신규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에서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6개 부문을 선도시장으로 선정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이 추구하는 높은 국민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환경친화적 삶의 질을 추구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녹색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경제를 선진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경제개발 모범국가에서 녹색성장 모범국가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7. 녹색성장 재정투자계획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3대 전략인 기후변화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

화를 이행하기 위해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9년~2013년 5년간 총 107.4 조원을 투자할 전망이다.

<표 3> 녹색성장 재정투자 계획

| 구분               | 2009년 | 2010~2011년 | 2012~2013년 | 증가율   |
|------------------|-------|------------|------------|-------|
| 계(조원)            | 17.5  | 48.3       | 41.5       | 10.2% |
|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 8.6   | 29.2       | 19.2       | 14.0% |
| 신성장동력 창출         | 4.8   | 10.7       | 13.1       | 9.4%  |
|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 5.2   | 10.5       | 12.2       | 3.6%  |

## 8. 녹색성장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녹색성장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는 2009년 GDP의 약 3.5%~4.0%로 가정하면 연평균 36.3~41.2조원으로 녹색성장 5개년계획 동안 약 182~206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유발은 2009년 1/4분기 전체 실업자의 26.0~32.4%로 가정하여 연평균 23.6~29.4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대 전략별 주요 고용창출 전망은 <표 4>와 같다.

<표 4> 3대 전략별 주요 고용창출 전망

| 전략               | 주요일자리   |
|------------------|---|
|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배출권거래 및 컨설팅 지원인력</li> <li>녹색펀드 운영 및 투자심리 인력</li> <li>중소기업 녹색성장 전담인력</li> </ul>       |
| 신성장동력 창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실가스 감·인증 전문가</li> <li>녹색 컨설턴트</li> <li>기후변화 적응 전문인력</li> <li>물 산업분야 맞춤형 인력</li> </ul> |
|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색건축물 평가·인력</li> <li>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전문 인력</li> <li>녹색성장 전문교육 인력</li> <li>녹색봉사단</li> </ul> |

## 9. 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 체계

### 1) 녹색성장 추진체계

녹색성장 추진체계 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으며, 종합계획은 다시 국가전략, 5개년계획, 기관별 계획 등 3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전략은 2009년~2050년까지 녹색성장의 장기 비전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5개년계획은 2009년~2013년까지 녹색성장 장기 비전 달성을 위한 5년 단위의 상세 실행계획이며, 기관별 계획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단위의 녹색성장 추진 계획을 말한다. 부문별 계획은 핵심계획과 연관계획으로 나누어 지는데, 핵심계획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목표와 직접 관련된 계획을 말하며, 연관계획은 녹색성장과 간접 연 관련 계획을 말한다. 핵심계획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연관계획의 범위는 국가과학기술기초계획,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망교통계획 등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